'국민의 정부'의 대학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21세기 대학의 사명과 역할

정 진 곤
한양대 교육학과 교수

1. 시작하는 말

대학사회에 개혁의 열풍이 불고 있다. 금년 7월초에 교육부는 대입제도 개선과 연구중심대학의 육성 계획을 발표하고, 재정 지원을 토대로 대학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서울대가 2002년부터 무시험전형에 의한 학생선발과 연구중심대학으로의 방향전환을 선언하면서, 여러 대학들도 이와 유사한 개혁안들을 앞다투어 제시하고 있다. IMF 체제에서 각 대학들은 기업체의 지원과 발전기금의 급격한 감소로 인하여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대학들은 교육부의 방침을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 서둘러 계획들을 발표하고 있다.

대학 개혁을 주도하는 교육부의 궁극적 목표는 무엇인가? 첫째는 대입제도의 개선을 통한 고교교육의 정상화이다. 현 정부는 일찍부터 사교육비의 감소와 대입제도의 개선을 가장 중요한 교육개혁의 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대학에 무시험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대학입시 위주의 파행적인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과외를 받지 않아도 고등학교 성적과 활동만으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교육비를 원천적으로 제거하자는 의도라고 생각된다.

둘째는 대학원 교육의 강화를 통한 대학의 경쟁력 강화이다. 교육부는 한국의 최고 대학인 서울대가 세계적으로는 물론이고 아시아 권에서도 10위 이내에도 들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회 있을 때마다 지적하면서 경쟁력 있는 대학의 육성을 강조해 왔다. 이

뿐만 아니라 대학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21 세기 혹은 지식·정보화 사회에 필요한 고급전문 인력을 제대로 양성해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 이러한 현실을 바로 잡기 위해 교육부는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과 전문인력을 양성해 낼 수 있는 전문대학원의 육성을 주장하고 있다.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21세기는 지식과 기술의 생산과 활용이 국력을 좌우하는 시대이며, 나라와 나라 간에 국경이 없는 경쟁의 시대이다. 따라서 "국가 생존전략의 핵심은 누가 새로운 지식과 기술 그리고 문화의 창조적 주도자가 되느냐의 문제이다(이기준, 419)". 이것은 곧 교육, 특히 대학교육이 지식과 기술의 창조와 활용의 측면에서 세계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왜냐하면 우리 나라 사회에서 대학은 연구인력의 대다수를 소유하고 있으며 대학은 지식과 기술 창조의 산실이기 때문이다.

과연 현재 각 대학에서 발표하고 있는 대학개혁의 방안을 통하여 지식·정보화 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 낼 수 있겠는가? 이에 대해서 필자는 회의적이다. 이 글에서 필자는 우선 이러한 생각의 근거와 이유를 간략하게 밝히고자 한다. 다음으로 우리에게 매우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후기 산업사회 혹은 지식·정보화 사회라고 불려지는 21세기 사회의 주요한 특징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한국의 대학이 어떻게 달라져야만 할 것인가에 대한 필자 나름의 생각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필자는 대학개혁의 초점은 대학이 그 본질적 역할인 교육, 연구와 사회봉사를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모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글에서 그 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2. 최근의 대학 개혁방안의 문제점과 보완점

먼저 서울대를 중심으로 최근에 발표된 대학의 개혁안은 크게 대학의 무시험 제도와 전문대학원 제도이다. 먼저 대학입시제도의 개혁을 살펴보자. 서울대에서 현재 중3학생이 대학에 진학하게 되는 2002년부터 신입생들을 고등학교장 추천에 의한 무시험 제도를 통하여 선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많은 대학들이 이와 유사한 입시방안들을 발표하고 있다. 처음 발표할 때에는 수학능력시험이 아닌 고등학교 성적, 특기, 활동상황 그리고 이제까지의 해당학교진학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고교별로 차등하여 선발하겠다고 하였으나, 이후에는 일정 점수 이상의 수학능력시험점수를 취득한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선발하되, 고등학교들 사이에는 차별을 두지 않겠다고 발표하였다. 앞으로 또 다시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질지는 모르나, 그 기본방향은 수학능력시험이 아닌 고등학교 성적과 활동상황을 위주로 선발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시제도의 개혁은 현재 파행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대학입시 위주의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하여, 고등학교 시절의 교육과 생활이 학생들의 지적, 정서적, 신체적 발달 단계와 특성에 알맞게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문제는 모든 고등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일류 대학에 진학할 수는 없으며, 고등학교들 사이에는 엄연한 학력 차가 존

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사설 입시기관인 중앙교육진흥연구소가 전국 6백 10개 일반계 및 특목고를 대상으로 '98년 4월에 실시한 모의수능 점수를 비교 평가한 결과, 일반계 고교 가운데 가장 높은 학교는 충남의 K고로 341.7점이었으며, 최저는 전북의 K고로 108.9점이었다. 이들 학교 사이에 점수 차이는 무려 2백 32.8점이나 되었다. 특히 과학고 등 특목고를 포함하면 최고와 최저간 학력 차는 2백 55.4점이나 되었다. 서울 등 평준화 지역 내에서만도 외국어고 등의 특목고를 제외하고서도 학교 사이의 차이는 매우 컸다. 서울에서 평균 수능 점수가 가장 높은 곳은 S고(2백 45.5점)로 가장 낮은 M고보다 1백 32.1점이 높았다.

이와 같이 현재 우리 나라의 전국 고등학교 사이에는 같은 지역 내라고 할지라도 글자 그대로 대학에서의 수학능력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문제는 과연 대학이 고등학교장 추천을 통하여 엄연히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고등학교 사이의 학력의 차이를 도외시하고, 어떤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것인가에 대한 방안이 현재로서는 뚜렷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연구를 한다고 해도 그다지 훌륭한 방안이 있을 것 같지 않다는 데 있다.

미국 등에서도 고등학교 성적과 활동 상황 등을 주요한 요인으로 고려하여 신입생을 선발한다. 그러나 이들은 그 대학에 진학하는 고등학교 학생들의 지적인 능력과 학업 수준에 대한 매우 체계적이고도 신뢰성이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다. 그들은 수십 년 동안 어느 고등학교에서 어느 수준의 학생이 그 대학에 입학하였으며, 그 학생이 어느 학과에 입학하여 대학에 다니는 동안 어떤 성적을 올렸다는 정보를 소유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들을 토대로 대학은 지원 학생의 수학 능력을 판가름할 수 있다.

미국의 대학은 해마다 실시되는 전국 표준화 학력 검사에 의하여 각 고등학교의 전반적 학력 수준이 어느 정도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동시에 대학은 수십 년에 걸쳐서 대학 나름대로 그 대학에 입학하는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력수준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다. 각 대학은 어느 고등학교에서 어떤 학생이 수학2 수준에서 A학점을 취득하였다면, 다른 고등학교에서 수학3 수준에서 B를 취득한 학생과 학업성적 면에서 거의 동일한 수준의 학생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나름의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1]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제출한 SAT 성적, 학교성적표, 활동상황, 특기, 수상경력 등을 토대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 대학들이 미국과 같이 전국의 고등학교 혹은 그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고등학교의 수준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고등학교에서 취득한 성적을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것은 대학교육에 심각한 질적인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또 현재와 같이 거의 모든

1) 미국의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지적, 학업적 능력의 수준을 고려한 수준별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같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학생은 같은 시간에 1수준의 수학을 공부하는가 하면, 다른 학생은 다른 교실에서 2수준의 수학을 공부하고 있다. 성적은 같은 수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겨지기 때문에 똑같은 고등학교에서 똑같이 A를 취득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들 사이에는 성적의 차이가 있다. 물론 고등학교들 사이에도 학력 차가 존재한다.

대학생들이 입학과 동시에 졸업이 거의 보장되는 제도에서는 대학인들 스스로가 한국의 대학은 누구나 들어와 졸업할 수 있다는 대학교육의 질적인 수월성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대학의 무시험 제도와 함께 서울대를 비롯한 많은 대학들이 대학원 중심대학으로의 전환을 선언하고 있다. 서울대는 기존의 단과 대학들을 인문, 사회, 기초, 응용과학, 공학, 음악과 미술 등의 7개 계열로 통합하여 학부대학으로 하고, 학부생들의 숫자를 줄여서 대학원생의 숫자를 늘린다고 한다. 동시에 교수들은 모두 대학원 소속으로 한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뉴욕 주립대의 김성복 교수의 다음과 같은 주장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 대학원 중심대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교수는 모두 대학원 교수가 되고 연구는 대학원에서 하면 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것으로 당혹스럽기 짝이 없다. 미국의 대학원은 학부의 전공과 연결되어 있으며 학부의 전공도 지금은 핵심강좌(core curriculum), 즉 교양강좌와 연결되어 있다… 학부는 학생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준다는 명분으로 연구활동을 경험하지 못하게 내버려두는 곳이 아니다. 대학원에 들어가서 연구를 시작한다는 것은 너무 늦다… 미국의 3,500개 대학 가운데 연구대학은 125개, 즉 3%밖에 안 되지만 전체 학부 졸업생의 3분의 1을 배출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원 중심대학이라는 개념은 재고되어야 한다(53).

최근에 한국에 내한한 옥스퍼드 대학의 콜린 루커스 총장도 "한국의 여러 대학이 추진하고 있는 '연구중심대학'으로의 전환"에 대하여 "위험한 발상이며, '연구'와 가르침이 분리된 대학은 생명이 길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중앙일보, 9월 25일)

대학원 중심대학의 전환과 함께 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전문대학원 제도는 애초에는 의·약학, 법학 등의 분야에서 소위 2+4제를 실시한다는 것으로 발표되었으나 그 후에 계속해서 바뀌어지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제도적 개혁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현재로서는 아무도 그 방향조차 예측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적어도 현재로 보아서는 앞의 입시제도의 개혁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미래를 내다보고 신중하고도 깊이 있는 개혁안이 제시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전문대학원 제도를 통하여 사회의 각 분야를 이끌고 나아갈 사회적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 사회의 변화와 세계적 추세에 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 개혁안이 마련되어야만 한다.

대학 교육의 목적은 일찍이 독일의 철학자인 야스퍼스가 지적한 바와 같이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한 단순한 기술 연마나 특정 능력을 배양하는 것만은 아니다. 의사, 법률가, 행정가, 사업가 등의 여러 직업을 위한 준비는 그 과정이 전인적이지 못하거나, 지각력을 계발시키지 못하거나, 안목의 지평을 넓혀주지 못하고 '철학적' 사고를 형성해 주지 못한다면, 그러한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에 도움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해악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외국의 경우에도 전문대학원 제도가 있다. 그러나 외국의 대학원은 4년 과정의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만이 입학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어, 법학 전문대학원은 대학의 학부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를 전공한 사람들이 전문대학원 과정에서 많은 경

우 자신의 분야와 관련된 법률을 전공하게 된다. 또한 대학원 과정을 충실히 이수하게 되면 법률가가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원 공부에 충실하게 된다. 나아가 전문대학원에서 이론과 실제를 충실하게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교수진과 교육여건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도 현재와 같이 사법시험 제도를 통하여 예비 법조인을 선발하는 방식을 그대로 둔 채 법학 전문대학원 제도만을 도입하게 되었을 때, 그러한 대학원은 고시에 합격하지 못한 학생들의 수험준비 장소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 대학원 제도의 개혁은 이와 같은 점에서 사회 전반적인 제도의 변화와 함께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제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의 대학 개혁안은 다가오는 미래 사회에 대한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전망에 기초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이며, 깊이 있는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이것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가지 못하고 있다. 눈앞의 현실에 얽매여 즉흥적이고, 일시적인 개혁 방안을 제시한 후, 여론의 향방에 따라서 좌우되는 개혁방안보다는 앞으로 우리의 미래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며, 이 가운데 대학이 감당해야 할 사명과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한 비전이 필요하다. 나아가 이러한 비전을 바탕으로 대학의 본질적인 역할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 경제, 과학, 교육 등의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 집단의 깊이 있고 체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다음의 논의는 필자 개인의 견해에 불과하며, 그만큼 제한적이고 비체계적인 논의가 될 가능성이 많다.

3.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의 특징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21세기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비록 21세기의 진입을 불과 2년밖에는 남겨 놓지 않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그 모습을 확실하게 예측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많은 학자들은 우리가 이미 발을 들여놓고 있는 지식·정보화 사회는 단순히 과거에 비하여 양적인 측면에서 더욱 발전된 사회가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 이제까지의 사회와는 대단히 다른 형태의 사회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허쉬혼(Hirshchorn)은 지식·정보화사회에서 인간의 삶의 방식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될 때와 유사하게 혁명적으로 변화된다고 주장한다. 농경시대에는 계절과 날씨가 인간의 삶에 거의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 일하는 시간은 해뜨는 시간과 해지는 시간에 따라 달라졌다. 산업혁명은 시간의 변화를 시계라는 기계를 통하여 알도록 하였으며, 인간의 생활이 시계에 의존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9시에 출근하여 5시에 퇴근하는 직장생활을 하게 되었으며, 시간에 대한 감각이 달라지게 되었다. 메트로폴리탄이라는 거대 도시가 형성되었으며, 신흥 재벌과 중산층이 탄생되었다. 기존의 상류층 가운데 상당수가 지배계층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공장에서 일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9시에 출근하여 5시에 퇴근하는 방식으로 생활하지 않게 된다. 일하는 시간에서 낮과 밤의 구분이 거의 없어지게 된다. 국제 무역, 여행, 스포츠 산업,

유흥 산업 등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뉴욕, 동경, 런던, 파리 등의 다른 나라 도시의 시간에 맞춰 생활하게 된다. 계절의 변화는 사람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 자신이 원하는 계절을 찾아 지구의 다른 지역으로 휴가 등을 떠나게 된다. 사회계층에도 많은 변화가 초래되어, 이제까지의 중·상류계층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몰락하고, 새로운 사람들이 지배계층으로 떠오르게 된다.

농경사회에서는 육체적으로 힘이 세고, 손재주가 좋은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었다. 산업 사회에서는 기술이 있고, 장사를 잘하는 사람들이 성공하였으나,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질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 각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소유한 사람들, 정보와 경영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에서 출세하게 된다. 두뇌 산업이 사회의 대종적인 산업을 이루게 된다.

사람들이 일하는 장소가 달라짐에 따라 사람들 사이의 관계도 많은 변화가 뒤따르게 된다. 농경사회에서는 사람들은 마을이나 전원도시에서 서로 밀접한 인간관계를 가지고 살아갔다. 산업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대도시에 살게 되었고, 급속한 도시화로 인하여 교통, 오염 등의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반드시 도시에 살 필요가 없게 된다. 사람들은 그야말로 지구촌에 살게 된다. 도시에서나 산간에서나 사람들은 컴퓨터를 통하여 서로 교신하게 되며, 정보를 주고 받고, 상거래를 하게 된다.

지식·정보화 사회는 마치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됨에 따라 더 이상 양치는 사람, 농부, 원예, 가내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사회구성원의 대다수를 차지하지 않게 된 것과 같이, 산업체와 생산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사회의 주종을 이루지 못한다. 물론 지식·정보화 사회의 초기 단계에서는 이와 같은 제조업종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경제, 사회, 직업생활,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의 선진국에서는 이미 이러한 변화를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1700년대까지만 해도 영국의 노동인구 가운데 절반 이상이 시골 농촌 지역에서 일을 하였으나, 1980년대 초기에 그 인구는 3%로 줄어들었다. 20세기 초에는 생산과 제조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40%였으며, 이차대전 무렵에는 50% 정도로 증가하였다. 최근에는 그 인구가 불란서, 독일, 미국 등에서 각각 22%, 32%, 16%로 줄어들었다. 컴퓨터 등을 활용한 생산기술의 발달과 자동화 등으로 인하여 이전보다는 훨씬 적은 인력으로 보다 많은 생산을 하게 되었다.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서비스, 정보산업, 하이테크, 보건과 교육 산업 등에 전문 기술 인력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매킨지 보고서에 의하면 2000년까지 유럽의 노동인구 가운데 5%가 농업 등의 일차산업에, 20%가 공장 등의 제품 생산업에, 그리고 25%가 서비스 산업에, 나머지 50%가 소위 '두뇌산업'에 종사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앞으로 지식·정보화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의 비중이 더욱 늘어나게 되며, 대학의 사회적 역할이 그만큼 중요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혁의 원천은 새로운 지식과 정보의 발견과 축적에 있다.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전환을 이룩한 원동력도 지식의 발달이었다. 이 점에 대하여 헤

드리 등(Hedley & Slaughter)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유럽에서 산업혁명은 계몽주의(Enlightment) 시대에 근대과학의 발달과 함께 이루어졌다. 산업혁명과 근대과학의 발달이 시기적으로 일치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왜냐하면 산업경제의 기반인 기술 자체가 근대의 과학적 연구 성과를 산업분야에 적용함으로써 발달된 것이기 때문이다. 산업혁명은 지난 200년 동안 유럽과 미국 사회의 거의 모든 분야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 왔다. 증기기관이 발명됨으로써 기차와 증기선을 이용한 값싸고 빠른 교통수단이 등장하게 되었다. 전기가 발명됨으로써 공장의 생산방식과 도시생활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생산수단의 기계화, 강철이나 플라스틱 등의 신소재 발명은 산업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내부연소엔진이 발명됨으로써 자동차와 비행기가 만들어지게 되었다(Hedley & Slaughter, 12)

근대에 이르러 과학자들은 자연 현상과 생산력에 대한 과학적 탐구를 통하여 증기기관과 전기 등의 에너지원과 함께 이를 활용한 생산수단과 교통수단을 발명하였다. 이러한 발명으로 인류의 생활은 혁명적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산업 사회가 지식·정보화 사회로 전환되는 시대에는 새로운 지식과 정보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사회에서는 공장에서의 재품의 생산능력보다는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토대와 능력이 국가의 앞날을 좌우하게 된다.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지식을 발견하고, 기존의 지식과 정보들을 체계화하며, 신속하게 전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국가는 발전해 갈 수 있지만, 이러한 능력을 소유하지 못한 국가는 뒤떨어지게 될 것이다.

4. 대학개혁의 방향

대학은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인가? 비록 소수이기는 하지만, 대학은 시대와 사회를 초월하여 존재할 수 있는 불변의 '진리'를 탐구하는 전당이며, 대학이 사회적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오히려 대학의 본질적인 역할과 사명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물론 이러한 의미의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공교육 기관으로서의 대학을 포함한 학교는 국가의 중요한 사회적 기관으로서 그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과 사명을 도외시하거나 소홀히 할 수만은 없다. 일찍이 고대의 철학자인 플라톤이 '국가론'에서 제시한 것처럼 국가와 교육 제도는 하나의 커다란 유기체적 조직이다. 학교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지식과 기술을 전수하며, 사회는 이러한 교육을 통하여 유지되고 발전되어 나간다.

대학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대학도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와 흐름에 부응해야만 한다. 최초의 근대적 대학으로 일컬어지는 베를린 대학도 훔볼트적 이념이 거의 제2차 대전 이전까지 영향력을 끼쳤으나, 제2차 대전 뒤에 이르러서는 그 시대착오적인 측면이 들추어지는 수모를 자초했다. 1663년에 설립된 하버드 칼리지는 최초에 학문과 성서 연구, 일반적인 대학 교양인과 성직자의 양성을 위해 설립되었다. 그러나 1840년대의 서부 개발, 잭슨 데모크라시 그리고 특히 남북 전쟁이라는 역사의 새로운 국면에 힘입어 실현된 연방 통합 및 사회의 산업화 현상은 지난날의 종교 교육과 일반 교양중심의 칼리지의 기반이었던 좁은 지역 공동체의 틀과

질서,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한 사회 계층 구조를 점차 해체하기에 이르렀으며, 하버드 대학은 그러한 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함으로써 아직까지도 세계의 유수한 대학으로 남아있게 된 것이다. 대학이 시대와 사회적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게 되면 대학은 사회로부터 배척을 받게 된다.

우리는 지금 시대적으로 산업화 사회에서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와 사회적 흐름에서 대학의 역할과 사명은 무엇인가? 이제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지식과 정보화 사회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고, 이를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토대와 능력이다. 대학은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과학기술연구소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박사급 이상의 연구인력은 27,073명으로서 전체의 77.1%를 차지하고 있다. 전공별로는 공학분야가 40.8%로서 18,223명, 이학분야 23.9%로 10,698, 의학분야 18.7% 8,341명이다(이장재, 55). 대학의 연구수준을 과학인용색인(SCI)에 수록된 논문수를 기준으로 할 때, 한국의 발표 논문수는 1996년에 총 7,295편이며, 이중 83%인 6,050편이 대학에서 발표된 것이다.[2] 이러한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대학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창출해 내는 데 필요한 인력의 절대 다수를 소유하고 있다.

지식·정보화 사회의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여 우수 연구인력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대학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만 하는가? 그리고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학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 것인가? 여기에서 필자는 최근에 대학개혁의 초점이 되고 있는 대학입시, 전문대학원 제도 그리고 학부제로의 전환 등과 같은 대학의 제도적 개혁과 방향 등에 대하여 논의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필자에게는 그와 같은 제도적 개혁방안에 대한 나름의 대안도 뚜렷하지 않고, 또한 그러한 제도적 개혁방안은 '교육개혁위원회' 등에서 그 동안 수없이 많이 제안되었기 때문이다. 단지 여기에서는 대학의 가장 본질적인 역할인 교육, 연구, 사회봉사 등의 측면에서 대학이 어떻게 달라져야 할 것인가를 간략히 논의해 보고자 한다.

먼저 대학교육에 대하여 살펴보자. 대학교육의 목표는 사회 각 분야에서 우리의 미래 사회를 주도해 나갈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충실한 대학교육은 밝은 미래를 보장하는 반면에 부실한 대학교육은 우리의 앞날을 어둡게 한다. 더욱이 지식과 정보화 사회에서의 교육의 내용과 방법은 시대와 사회적 변화에 알맞은 방식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나아가 학생들에게 그러한 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길러주어야만 한다.

그러나 우리 대학교육의 현실은 이러한 시대와 사회적 변화와는 거리가 멀다. 아직도 대학 강의는 전통적인 방식에서 크게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강의는 교수가 학생들에게 노트나 교과서에 담겨져 있는 기존의 지식 혹은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21세기 사회에서

2) 한국의 발표논문 순위는 1996년에 세계 19위 수준이다. 그러나 절대수의 기준으로는 미국의 1/38, 일본의 1/9 수준이며, 중국(14위:14,009편), 대만(18위:7,387)보다 뒤져 있다.

는 기존의 지식을 배우고 익히는 능력과 자질보다는 이러한 지식을 활용하고,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창출해내는 능력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지식을 학생들에게 전수하기보다는, 학생들에게 기본 개념만을 가르쳐준 뒤, 학생들 스스로가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탐색하는 방법, 그러한 지식과 정보들을 종합하거나 분석하고 비판하는 방법 그리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창조해내는 능력 등을 배양해 주어야 한다.

또한 책뿐만 아니라 비디오 테이프, CD, 컴퓨터 등의 다양한 형태의 매체를 교육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또한 캠퍼스에서의 강의와 함께 여러 가지 통신매체나 컴퓨터와 인터넷 등을 활용한 재택 수업이나 직장 수업 등을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앞으로 교육분야에는 각 교과와 주제에 대한 강의 내용, 자료와 매체 등이 패키지로 되어 상품화될 가능성이 많다. 예를 들어, '교육사'의 강의를 위하여 각 시대별 시대·사회적 모습, 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이 비디오 테이프 혹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패키지되고, 인터넷을 통한 교수와 학생 그리고 학생과 학생 간의 상호 학습 등도 가능한 강좌가 개설되며, 이를 통해 대학별 혹은 교육기관별로 수강생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이루어질 것이다. 좋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학생들을 교육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이며,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 나가는 교육활동이 가능해질 것이다.

대학의 교육과정도 달라져야 한다. 새로운 시대와 사회적 흐름과 방향에 부합하는 강좌가 개설되어야 하며, 이에 뒤지는 강좌는 과감히 정리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강좌의 개설과 폐강을 수요자 중심이라는 이름 아래 전적으로 학생들의 선택에 일임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경우 이미 일부 대학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학생들이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처할 수 있는 유익한 강좌를 선택하여 수강하기보다는, 학점 따기 쉽고, 흥미가 있어 보이는 강좌에 몰리는 경향이 있다. 교육은 어느 단계의 교육이든 학생들의 흥미에 모든 것을 내맡길 수는 없는 것이며, 교육자의 깊이 있고 폭넓은 지혜와 앞을 내다보는 판단과 지적 안목에 의하여 학생들을 이끌어 주는 과정이 있어야만 한다. 대학에서는 '교육과정 위원회' 등을 활성화하여 세계 여러 나라 대학들의 교육과정을 심도 있게 조사하고 분석함과 동시에 앞으로 우리 사회의 발전 방향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교과목들을 개발하여야만 한다. 강좌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서는 대형강의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지도해 주고, 교육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제까지의 학과와 단과대학들을 어떻게 묶고, 조직할 것인가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대학 과정에서 모든 학과간의 구분을 없애고, 대학교 전체를 하나의 학부 혹은 몇 개의 학부로 묶는 것만이 유일한 방안은 아니다. 인문, 사회계열은 학문의 특성상 학부과정에서 지나치게 학과를 세분화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대학 과정에서 각 분야를 보다 폭 넓게 공부하기 위하여 학과들을 통합하거나, 여러 학과의 과목들을 연계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공학계열의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서로 이질적인 학과를 학부제라는 이름 아래 강제로 통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현재 많은 대학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부제는 모든 대학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획일적으로

실시하기보다는 대학의 규모, 학문의 성격, 교양교육과 전문지식과 기술의 습득, 각 대학의 특성, 사회와 기업체의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이에 알맞은 다양한 방식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대학의 개혁은 핀셔(Fincher)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의도적이고 계획된 변화와 자연적이고 기대하지 않았던 변화가 균형을 이루어야만 한다. 대학은 대학 구성원인 교수와 학생들의 요구와 필요에 의한 자연스런 변화를 폭 넓게 수용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대학 밖의 시대와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만 한다.

연구는 교육과 함께 대학이 감당해야 할 주요한 역할과 사명이다. 연구를 통하여 대학은 사회에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발견하며, 이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기여해야만 한다. 지식은 결코 고정된 형태로 존재하지 않으며, 항상 새롭게 창조되고 발전되어 나간다. 특히 우리 나라와 같이 연구 인력이 대학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학연구의 부실은 지식과 정보화 사회에서 시대적 흐름에 뒤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학에서의 활발한 연구를 위해서 대학은 어떻게 달라져야만 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그 동안 여러 사람들에 의하여 대학의 연구여건과 풍토의 조성, 시설 및 설비의 확충, 기업과 대학 간의 연계 등 수 많은 개선방안들이 제안되었다(교육개혁위원회). 정범모 교수가 지적한 바와 같이 대학 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개혁의 핵심적 문제는 "어떤 묘안을 안출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백출(百出)한 묘안 중에서 단안을 내려야 하는 문제(413)"라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필자는 여기에서 대학 연구의 개선을 위한 또 하나의 특출난 묘안을 제시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단지 21세기의 시대적 흐름과 관련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유하고 있거나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분야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육성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후기 산업사회에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경제, 문화,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국가간의 장벽이 무너지고, 세계 각국이 활동의 무대가 된다. 이러한 지구촌 시대 혹은 세계화 시대에는 그 경쟁의 대상이 세계 각국이 될 수밖에 없다. 대학도 교육과 연구의 측면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추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분야를 선정하여 국가적으로 혹은 대학별로 집중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 나라 대학의 모든 분야 혹은 우리 나라의 모든 대학이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면, 국가적 차원에서 경쟁력이 있는 몇 개의 분야를 선정하여 여기에 한정된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국가적 차원에서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분야가 무엇인가를 체계적으로, 폭 넓고 깊이 있게 탐색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아가 기업과 사회의 각 분야 그리고 대학에서 이러한 분야의 인재를 어떻게 양성하고, 어떤 방식으로 연구를 촉진할 수 있는가를 탐색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또한 각 대학에서도 다른 나라 혹은 다른 대학과 비교할 때, 경쟁력 있는 분야를 선정하여 인적, 물적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이 결코 교육과 연구를 분리하여 특정 대학을 소위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

아들여져서는 안 된다. 교육과 연구는 상호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연구가는 흔히 가르치는 사람으로서는 부적격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단지 학습내용을 전달하는 기술이 부족할 뿐이다. 본질적으로 연구에 열심인 사람만이 학생들에게 진정한 발견과정을 인식시킬 수 있다. 연구를 하는 사람만이 학문에 생명력을 불어 넣어줄 수 있으며, 기본적인 개념과 학문의 흐름도 그러한 교수와 교류할 때 비로소 명확해진다. 그는 학생들에게 자극을 주고 탐구정신을 불러일으키며 학문의 근원지로 인도한다. 스스로 연구하는 사람만이 진정 가르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미 알려진 것들이나 교육학적으로 체계화된 결과들을 전달할 뿐이다. 대학은 결코 지식만을 전달하는 학교가 아니라 연구를 생명으로 하는 고차원적 교육기관이다.

현대 사회에 이르러 대학의 또 다른 주요한 역할은 사회봉사이다. 대학에서의 사회봉사란 단순히 현재 우리 나라와 같이 대학교수가 대학 및 정부의 각종 위원회의 위원활동이나 외부의 강연 등을 의미하지만은 않는다. 물론 이러한 개인적인 활동도 사회발전에 보탬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활동을 대학에서 사회봉사라는 이름으로 승진이나 재임용 등에 점수로 반영하여 권장하게 되면 자칫 대학교수의 본래 임무인 교육과 연구를 오히려 소홀히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사회봉사가 교육과 연구와 함께 대학의 주된 역할로서 인식되기 시작하는 것은 주로 미국의 랜드그란트(Land Grant) 형식으로 설립된 주립대학에 의해서이다. 미국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정부에서는 주로 농업, 공학기술, 경영, 교육, 신문방송, 사회사업, 가정경제 등과 같은 실제적인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 주민들과 지역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해결과 그들의 발전을 위해 대학을 설립하고, 이를 위한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하였다. 대학은 대학이 소유하고 있는 인적 자원들을 활용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고, 발전을 도모해 갈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연구하며,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과 다양한 활동을 개발하여 실시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봉사하였다.

따라서 대학의 사회봉사란 원래 대학교수 개인적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대학이 지역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그러한 문제들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 적합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나감으로써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농촌지역에 있는 대학은 그 지역사회의 농업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고도의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심도 있게 연구하고, 필요한 경우 지역 지도자들과 지역주민들의 교육과 연구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5. 맺는 말

이제까지 우리는 최근에 대학개혁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대학입학 무시험제도와 연구중심대학 등의 개혁안을 살펴보았다. 전자는 현행 고등학교 사이에 존재하는 엄연한 학교차이를 도외시하고 있으며, 후자는 교육과 연구의 밀접한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대학의

개혁은 눈앞의 현실적인 필요와 요구보다는 미래 사회에 대한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전망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21세기 사회는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화 사회로 전환이 이루어지는 시기로서, 국가와 사회의 힘과 부의 원천은 지식과 정보이다. 인류의 미래 혹은 국가의 앞날은 과거의 지식을 축적하고 동시에 우리의 장래를 결정지을 새로운 지식과 기술들을 창출하는 것에 달려 있으며, 대학은 그 어느 사회적 기관보다 가장 많은 책임과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또한 국제화 사회로서 세계 각국이 교역, 경제생활 등의 측면에서 국경이 없어지게 된다. 안방에 앉아서 인터넷 등을 통하여 자신이 원하는 물건을 구입하고, 국제 무역과 교역이 더욱 활발해진다. 경쟁의 무대가 더 이상 국내가 아닌 세계 무대에서의 경쟁이다. 국제경쟁에서 뒤떨어지는 기업과 상품은 도산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을 통하여 국제경쟁력을 지닐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내야만 한다.

대학은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이끌어 나가야만 한다. 기존의 지식을 배우고 익히는 능력보다는 이러한 지식과 정보를 활용하고,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출해 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학의 강의방식과 교육과정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국가적 차원에서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분야를 폭넓고 깊이 있게 탐색하여 국가, 기업 그리고 대학이 다 함께 힘을 합하여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인재를 양성하며, 연구를 촉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성복(1998), '미국 대학의 학사 구조와 교육개혁', 대학교육, 94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김영걸(1975), '미국의 대학원 제도', 한국 대학원 교육의 성격과 전망. 전국대학원장협의회.

교육개혁위원회(1996),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보고서 제1집. 교육개혁위원회.

이기준(1996), '대학교육 개혁방안',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보고서 제1집. 교육개혁위원회.

이광주(1997), 대학사, 민음사.

이장제(1997), 대학연구의 현황과 미래, 과학기술정책관리 연구소.

정범모(1996), '한국 대학의 위기와 개혁방안',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보고서 제1집. 교육개혁위원회.

중앙일보, 1999년 9월 25일자 신문.

칼 야스퍼스(이수동 역, 1997), 대학의 이념, 학지사.

Beare, Hedley & Slaughter, Richard(1993), *Education for the twenty-first century*, London ; R & KP.

Fincher, Cameron(1993), 'The Idea of the University in the 21st Century : An American Perspective' in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Vol. 41*, No. 1, March 1993.

Shalala, Donna(1991), 'New Paradigms : The Research University in Society' in *TCR. V.92*, N.4, Summer 1991.

정진곤/서울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일리노이대학교 대학원 교육정책학과에서 교육철학을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교육개발원을 거쳐 현재 한양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저서로 『현대사회와 교육의 이해』(공저), 『개인중심사상과 교육』(역서) 등이 있고, "개인중심 교육 사상의 논리와 한계", "대안교육에서의 자유의 의미와 그 비판적 분석" 등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